

1997년 북한, 현재 상태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Aidoo Carter
영국 Leeds대학 교수

과거에 신중하지 못한 식도 있기에, 1997년 북한을 전망함에 있어 나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 1992년 경제학자들의 정보 교류 모임에서 발표된 나의 논문 「다가오는 한반도 통일」에서 다음과 같이 쓴 적이 있다. “한국은 통일될 것이다. 2000년까지는 확실히 통일될 것이며, 1995년까지는 아마 통일될 것같으며(개연성), 어쩌면 조만간 곧 통일될 가능성도 있다(p. 96).” 그러나 한반도 통일 시점에 대한 개연성에 근거한 전망과 가능성에 근거한 전망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확실히 통일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내가 여전히 확신할 수 있는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통일의 시점뿐만 아니라 통일의 방법에 대한 전망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점진적인 변화(이행)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구동독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어느 순간 체제 붕괴가 이루어질 것이다(p. 96).” 그 후 서울에서의 토론에서 나는, 그러한 나의 논지를 위해 ‘붕괴론(collapsism)’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기대인 것이다. 90년대 초 남한에서 그러한 붕괴론적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금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모든 선입견을 배제한 채, 1997 북한을 한 번 전망해보자. 이와 관련, 이하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세 측면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정치

현재 북한의 정치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김일성 사망 이후 정당한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가 주석과 당 총비서가 2년 이상 공석으로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타의 다른 제도 역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1995년과 1996년 두 해 동안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윤기정의 통상적인 예산 보고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여튼 현재의 최고인민회의는 사실 임기가 끝난 것이다. 때문에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할 새로

은 선거가 1995년에 치루어졌어야 했다. 조선노동당도 마찬가지인데, 1980년 당대회 이후 16년 동안 전당 대회가 소집된 적이 없으며, 당 중앙위 전원회의도 개최되었는지도 확실치 않다.

이는 북한의 정치체제의 다음과 같은 두번째 특징과 관련된다.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공직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행사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1994년 7월 이후 당 중앙위 전원회의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망한 오진우 대신 최광이 마침내 인민부력부장을 승계하듯, 사망자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면 권력 엘리트의 그 누구에게도 직위나 당 서열의 변동이 없었다. 그 어떤 정치체제에서도 이것은 기묘한 현상일 것이며, 한창 권력 승계와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공산주의체제에서는 특히 그러할 것이다. 심지어 병들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눈밖에나 명목 상으로만 어떤 직위에 남아 있는 사람들조차 그러한데, 그 각각의 예로 정무원 총리 강성산과 김정일의 삼촌이면서 그와 사이가 좋지 않은 김영주를 들 수 있다. 김영주는 아직까지 국가 부주석과 당 정치국 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북한 정치체제의 기능이 정지되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북한 정치체제의 세번째 기묘함은 북한에서 정치 행위로 간주되던 대규모 공공 기념 행사조차 최근 들어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가령, 9월의 국가 창건일이나 10월의 당 창

건일과 같은 주요 정축 기념일이 지난해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넘어갔다. 이것은 홍수와 식량 부족이 2년째 계속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 지역 주민의 대부분을 한 곳에 결집시킬 경우 그것이 야기할 수도 있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북한 당국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지 않고 있는 것이나 김정일의 대관식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공식적인 정치 과정이 중단 상태에 있다면, 실재하는 것은 무엇일까? 군부가 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현재 군부가 북한을 장악하고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몇가지 증거가 있다. 권력 서열에서 몇몇 군 차수들의 부상, 1995년 당 창건 50주년 기념식을 군부가 사실상 주도한 점, 특히 이전과 달리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공식 행사(공식 등장)는 거의 모두 군 관련 행사였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다소 성공적이었던 나진·선봉 투자포럼(9. 13~15) 직후에 발생한 1996년 9월의 잠수함 침투 사건도 군부에 의한 방해 공작임을 암시한다. 이것은 북한의 군부가 잠수함을 의도적으로 좌초시켰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 아마 평화 공존에 대한 아주 작은 전망조차, 특히 KEDO의 경수로 사업을 사보타즈(sabotage - 분자 그대로)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때문에 나는 김정일이 통치하기 보다 오히려 군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김정일은 명목 상의 대표이거나 또는 기껏해야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의 중재자(조정자)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 주민들이 위대한 지도자, 친애하는 지도자를 계속 되풀이하여 외치고 있지만, 북한에서 실질적인 리더십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단 하나의 주요한 예외라 할 수 있는 핵문제를 제외하면, 북한이 직면한 수없이 많고 긴급한 도전들 가운데서 제대로 장악되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표류 현상은 심지어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김일성 사망 이후 더욱 악화되어왔다. 때문에 솔직히 말해 나는 김정일이 마침내 올해 공식적인 권력 승계를 할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만일 김정일이 올해 공식 승계를 한다면 그것은 김정일의 실제 권력과 그 체제의 신용을 모두 중대시해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나는 올해에도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

북한에서 곤경과 대담하게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경제 부문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비록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북한의 각료들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을 시인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

협력위원회 김정우 위원장은 1996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이 1990년 1,000 달러에서 1995년에는 719 달러로 떨어졌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GNP가 170억 달러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에서 보통 언급되고 있는 수치보다 작은 것이다. 보다 최근에는 북한의 외교부장 김영남이 독일의 한 TV와의 인터뷰에서, 2년간 계속된 홍수와 사회주의 시장의 몰락으로 북한 경제는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홍수와 사회주의 시장의 몰락은 북한 경제에 참으로 심대한 타격이었지만, 이것은 북한 경제가 복합적인 병목 현상으로 인해 이미 뼈적거리며 정체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계획 경제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은 사회과학에서 분명한 하나의 법칙이며,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저자인 코르나이(Janos Kornai)에 의해 훌륭하게 이론화되었다. 북한 경제의 가장 심각한 취약점은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경제 개혁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데 있다. 심지어 김정우조차 중국식의 개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쿠바의 예를 따를 수도 있는데, 쿠바는 사기업을 조심스레 허용함으로써 1996년의 경제 성장률이 약 5% 정도 예상되는 등 脫소비에트화에 따른 경제 침체 현상을 저지할 수 있었다.

북한도 이들 나라의 선례를 따라갈 것인가? 지난해 북한이 일부 지역에서의 농업 분야에 사실상 분조도급제를 도입하였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뉴스이다. 중국에서처럼 개혁은 리더십에 의해 공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 지방생들은 그러한 개혁 바람이 다시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은 착취자로 낙인찍힐 것이다. 이미 어느 정도 산업화되어 있고 또 이미 농업이 집약화되어 있는 북한과 같은 특수한 조건에서, 농업 개혁만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경제에 역동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런지는 명확치 않다.

보다 유망한 방법은 수출 지향적 공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제3차 7개년계획(1987~93년)의 실패 - 북한은 이를 시인하였지만 그 실행 성과는 예측 불가능 - 에 따라 지난 3년간의 '완충기' 경제 과업으로 제시된 농업, 경공업, 무역 등 3대 제일주의 방침의 하나이다. 정치에서의 표류 현상에 덧붙여 1997년이나 그 이후의 인민 경제 계획과 관련하여 알려진 게 아무 것도 없다. 계획체계가 사실상 와해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수출 지향적 공업은 지난 십여 년간 조총련에 의해 개척되어왔는데, 예를 들어 신사복의 일본 수출 능 얼마간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로 임가공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주)대우

가 남포에 공장을 설립한 바 있다. 또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가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투자 약속 금액으로 알려져 있는 3억 5,000만 달러 가운데, 원래의 계획대로 수출 목적의 제조업에 투자된 것은 거의 없는 듯하다.

교육받고 훈련된 값싼 노동력 등 북한은 확실히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문제점도 있다. 정치적으로 남북한 정부 당국이 주저하고 있다. 남한은 잠수함 사건이 기업들의 대북 투자 집착을 동결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허용하며 냉온탕을 오고 갔다. 반면, 북한 역시 남한 기업들의 자유로운 대북 진출을 꺼려하였다. 경제적으로 그 정도의 교류 수준으로는 기껏해야 아주 작은 규모의 수출 공단이나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북한의 기간 산업과 낡은 사회간접시설의 현대화라는 거대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낼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불행하게도 북한 경제에서 진짜 우선권은 평양의 동쪽 강동 구역에 있는 제2경제위원회에 있다. 군사 경제는 감소되고 있는 자원 가운데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민간 기업은 가동이 중단되고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다. 역설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외화벌이가 최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로의 마약 밀수에 북한 관리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과 태국에서의 위조 달러 유통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외환 달러들이 런던 금융 시장에 참여하는 기묘한 현상까지 낳고 있다. 그러한 필사적 모험을 통해 약간의 돈을 벌고 기업가적 재능을 연마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평판만 나쁘게 할 뿐,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결국, 20년 전에 모든 지표에서 서로 비등했던 남북한 경제는 지금은 동일선 상에서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다. 1997년의 경우, 남한의 GDP는 대략 5,400억 달러로 180억 달러인 북한의 30 배 정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격차가 마침내 이루어질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는 본 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남한이 부유해질수록 북한에 도움이 되는 재원을 더 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

북한에 대한 많은 분석들이 경제와 정치에만 치우쳐 있는데, 이는 불완전한 것이다. 북한의 운명이 궁극적으로 결정될 지점은 사회 영역에서이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사회가 현재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가? 북한이라는 운둔의 오아시스에는 그 체제에 대한 신봉자들만이 살고 있을 것이라는 뿌리깊고 관에 박힌 듯한 외부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의 실재는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1996년 말 며칠 간격으로 있었던 귀순과 귀환이라는 두 개의 서로 상이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 하나는 회령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 김경호氏 일가족 16 명의 귀순이며, 다른 하나는 남한에 표류된 10대의 북한 인민군 병사 정광선氏로, 그는 망명하라는 온갖 회유를 단호히 거부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해 영웅적 환영을 받았다.

오늘날 북한에는 김경호氏와 같이 북한체제에 진저머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광선氏와 같이 북한체제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충성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탈북자의 수가 지금까지는 매우 작았지만 앞으로는 (아마 극적으로) 증가될 게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김경호氏와 같은 동기(서울에 사는 형제·자매)나 자원(뉴욕의 부유한 장인과 연변의 장모)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할 것이다. 올봄 북한의 식량 기근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굶주림과 절망감은 중국 국경선 부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북한을 탈출하고자 하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별 수 없이 북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도 더 이상 과거의 그들이 아니다. 민족통일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90년대 북한의 대외 무역과 농업이 붕괴되기 이전, 즉 적어도 80년대 중반부터 증대되어온 곤경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약화시키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생활 수준에서의 이같은 하락은 김정일의 부상과 동시에 일어났다. 이 기간 동안에 뇌물과

범죄(절도 등), 냉소주의가 증대되었다. 최근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거나 생존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대체로 용인해주고 있다. 당국이 더 이상 생필품을 공급(배급)해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몇몇 사람들은 암시장이 북한 경제의 완전 붕괴와 주민 폭동을 방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대되는 암시장은 체제 안정화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지금 당장은 이것이 사실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북한 사회의 결정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당국은 생필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으며, 현재로서는 생필품의 공급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도 없을 것이다. 북한 당국이 그것을 모두 대외 관계와 기후 탓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북한과 인접해 있는 중국과 남한에는 식량이 풍부하다는 간단하고도 더 널리 알려진 사실에 의해, 결국 주민들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주민들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감에 빠지고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는 여지껏 내가 북한붕괴론자로 남아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가 1992년에 보다 신중하게 서술한 바 있듯이,

“붕괴의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고 좋은 대북 정보를 접하고 있는 美 CIA 존 도이치 국장은 지난해 12월 美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향후 2~3년 내에’(이는 내가 한국의 통일이 확실시되는 시점으로 2000년을 설정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북한체제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도이치 국장은 그러한 변화는 전쟁(對南 도발), 자체 붕괴, 평화적 통일이라는 세 가지 형태 가운데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경로는 모두, 북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동일한 귀결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5년 전에 쓴 것이긴 하지만, 체제 유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북한의 능력을 과소 평가했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러나 숨을 거두는 것은 병이 낫는 것과 동일한 게 아니다. 아직도 환자는 그가 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필요한 약을 먹는 것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물론, 남한이 북한에 대해 이식 수술을 제공할 것인지 안락사시킬 것인지를 놓고 양자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음을 볼 때, 북한의 불신을 이해할 법도 하다. 남한의 선택과 북한의 대응, 이것은 또 다른 주제이다. **■**

격려하자 신체발달

経協

작

ARTIST

